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국가안보실

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국가안보실

대한민국
대통령실

서문

오늘날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 앞에서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인류는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의 순풍 속에서 안정과 풍요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류는 역사상 가장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가치와 이념, 국가 간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원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감염병,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와 같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초국가적 위협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 지능과 빅데이터가 가져올 변화는 국가안보에도 커다란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국가안보는 이제 더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가올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어내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일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70여년 동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전례없는 도약과 번영을 이루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분명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자유 세계와의 연대는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원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와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을 과학기술 강군으로 꾸준히 성장시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나아가 질병과 기아, 빈곤, 문맹과 디지털격차, 기후환경 위기 등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은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미래 비전에 대한 구상과 고찰을 담았습니다. 이 책자가 국민과 국제사회에 우리 국가 안보 전략 방향을 소상하게 소개하여,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국론을 결집하고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을 나침반 삼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자유, 평화, 번영의 길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2023년 6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Contents

I.....		
국가안보전략 개관	1. 국가안보전략 기본 방향	8
	2. 국가안보 목표	11
	3. 국가안보전략 기초	13
	4. 국가안보전략 체계	15
II.....		
안보환경 평가	1. 세계 정세	18
	2. 인도-태평양 정세	21
	3. 한반도 정세	24
III.....		
자유와 연대의 협력외교 전개	1.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28
	2. 새로운 수준으로 한·미·일 협력 제고	33
	3. 인류보편적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35
	4.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40
IV.....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구촌 번영 기여	1.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 강화	48
	2.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는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52
	3.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정보역량 강화	54

V.....

**과학기술 강군
육성**

- 1. 국방혁신으로 AI 과학기술 기반 방위역량 강화 58
- 2.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창출 62
- 3. 장병 정신전력 강화와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64

VI.....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

- 1. 북한 핵·WMD 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강 68
- 2.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71
- 3.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74
- 4.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76
- 5.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79

VII.....

**글로벌 경제안보
대응체제 확립**

- 1.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84
- 2. 핵심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 확보 87
- 3. 핵심·신흥기술 보호와 협력 강화 89
- 4.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경제 전환 가속화 92

VIII.....

**신안보 이슈에
능동 대응**

- 1.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98
- 2. 보건안보 체계 개선 102
- 3. 국가 대테러 역량 강화 104
- 4. 국가 차원의 재난 위기관리체계 강화 106

I

국가안보전략 개관



1 | 국가안보전략 기본 방향

2 | 국가안보 목표

3 | 국가안보전략 기조

4 | 국가안보전략 체계

1 국가안보전략 기본 방향

윤석열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 번영을 이루어 달라는 국민의 염원을 안고 출범하였다. 특히, 안보위협 요인들이 증대 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능동적으로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

현재 대한민국 안보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들어 북한은 핵 선제 사용과 전술핵 운용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확충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해진 만큼, 악화된 한일관계를 협력 기조로 전환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전환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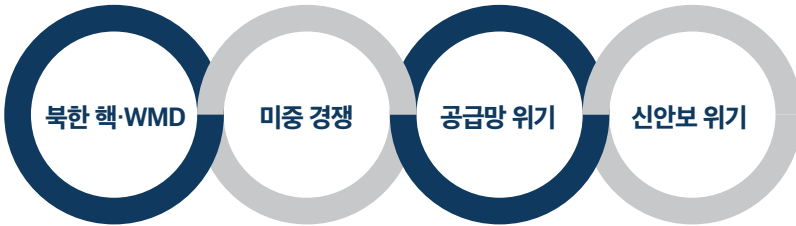
둘째, 미국·중국 간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제질서의 유동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경제력 성장을 토대로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현재의 세계정세를 ‘민주주의 對 권위주의 간 대결의 변곡점’으로 규정하고 동맹·우방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경제와 안보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국가간 경제안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구축됐던 다자무역 질서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주도권 다툼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주요국간 경제안보 갈등은 개별 국가들의 산업·자원의 무기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심화되었으며, 에너지·식량·원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으며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감염병·기후변화·사이버 해킹 등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들이 인류 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위기들은 그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구조로 인해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가 심화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보다는 각자도생을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 주요 안보 도전요인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외교 안보 비전으로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국가안보전략 기본철학을 토대로 당면한 안보 도전에 대응하고자 한다.

- 우리의 독자적 국방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방·동맹국과 긴밀히 연대하여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창출한다.
- 국제사회의 보편타당한 원칙과 규범을 존중하고, 자유·인권·법치 등 인류 보편적 핵심가치 침해에 침묵하지 않고 이를 적극 수호한다.
- 국익과 실용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한다.

I. 국가안보전략 개관

-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여 안보 인식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유사시 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론을 결집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대한민국의 안보환경과 국가안보전략의 기본철학을 토대로 국가안보 목표, 전략기조, 전략과제를 도출하였다.

2

국가안보 목표

윤석열 정부는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외교안보 비전으로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3대 국가안보 목표를 설정하였다.

■ 국가안보 목표

1

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증진

2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면서
통일미래를 준비

3

동아시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역할을 확대

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증진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 주권과 국토를 굳건히 수호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각종 도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이를 강력히 응징하고 격퇴한다. 또한 경제·사회·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포괄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한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면서 통일미래를 준비한다.

윤석열 정부는 원칙있는 대북 접근을 일관되게 펼침으로써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한다. 북한이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내리도록 이끌어내는데 주력

I. 국가안보전략 개관

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국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자유민주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대내외 통일미래 기반을 조성한다.

동아시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역할을 확대한다.

정부는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유·민주·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한다. 또한 규범에 입각한 공정한 국제협력을 꾀한다. 나아가 우리의 선진 과학기술 역량을 토대로 인류 번영을 위해 각종 글로벌 현안 해결에 적극 기여한다.

3 국가안보전략 기초

윤석열 정부는 3대 국가안보 목표 이행을 위해 △외교 △국방 △남북관계 △경제안보 △신안보 등 주요 분야별 전략기조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국가안보 전략 기조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와 가치외교를 구현한다.

- 협력 국가들과 공동이익의 폭을 넓혀 국제협력의 기반을 확장해 나간다.
-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
- 지역·국가별 특성에 맞게 특화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데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한다.

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한다.

- 선진 과학·IT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형 강군을 육성한다.
-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전방위적인 국방태세를 확립해 나간다.
- 장병들의 실전적 훈련과 분명한 대적관 확립으로 무형전투력을 극대화한다.

I. 국가안보전략 개관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남북관계를 정립한다.

-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
- 상호주의에 기반한 대화와 협력으로 윈윈있는 남북관계를 정착시킨다.
-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경제안보 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한다.

- 민·관 협업으로 융합적이고 다층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글로벌 리더 국가들과 협력해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한다.
- 국제경제협력체에 적극 참여하여 의제를 선점하고 문제해결을 주도한다.

신안보 위협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한다.

- 비전통적 안보 현안들에 대한 위기예방 시스템을 적극 가동한다.
- 위기에 대한 조기경보 체계와 민·관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한다.
- 사이버안보·기후변화·감염병 등 신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4

국가안보전략 체계

【국가비전】

자유 · 평화 ·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가안보목표】



【전략기조】

-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와 가치외교를 구현
- 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
-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정립
- 경제안보 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
- 신안보 위협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

【전략과제】

- 1 자유와 연대의 협력외교 전개
- 2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구촌 번영 기여
- 3 과학기술 강군 육성
- 4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
- 5 글로벌 경제안보 대응체제 확립
- 6 신안보 이슈에 능동 대응

II

안보환경 평가

“국제사회는 지금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인권유린이 멈추지 않고,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식량안보와 에너지 안보의 위기는 전쟁 장기화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ASEAN+3 정상회의(2022.11.12.) 모두발언 중에서

-
- 1 | 세계 정세
 - 2 | 인도-태평양 정세
 - 3 | 한반도 정세

1 세계 정세

지금 전 세계에서는 수 세기에 걸쳐 일어날 만한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이고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술혁신과 정보혁명 덕분에 인류의 삶은 윤택해졌으나, 기후 변화, 팬데믹, 핵확산, 사이버 해킹 등 현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안보 위협들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또한 강대국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무력 침공, 자원 쟁탈전과 같은 전통적인 지정학적 안보위협 요인들도 재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안보 위협이 세계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위기의 양상 또한 복합적으로 전개되어 세계정세는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실정이다.

■ 세계 정세

- ✓ 미국·중국간 외교, 경제, 군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이 격화
- ✓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신안보 위협도 다양해지는 양상
- ✓ 경제안보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

미국·중국 간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를 견제하면서, 외교·경제·군사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고, 미·중 관계를 양국간 대립을 넘어 ‘민주

주의 對 권위주의’로 대변되는 가치와 체제의 대결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광범위한 동맹 네트워크와 외교적 영향력을 토대로 경제·기술 다자협의체를 구성하며 중국의 부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주도의 경제지원 계획과 안보 구상을 발표¹하며 국제질서 변화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연임이 확정된 후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펴면서 ‘일대일로’²에 기반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우군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받고 있는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연대하여 미국과 서방에 함께 맞서고 있다.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신안보 위협도 다양화되고 있다.

미국·중국간 경쟁 심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유럽·인태 국가들의 안보불안을 심화시켰다. 일례로, 독일은 기존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여 국방비를 GDP 2% 수준으로 증액하였고 중립국인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2023.4.4.)한데 이어 스웨덴도 추진하고 있다.

신안보 위협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보건안보 측면에서 코로나19 변이와 재유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인한 자연재난과 식량 부족도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난과 경제난으로 일부 국가들이 오히려 석탄 소비와 수입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응집력은 약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킹·가짜 뉴스 확산 등 사이버전이 전장의 주요공격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내전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면서 인도주의 위기는 물론 테러리즘과 혐오범죄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 중국은 2022년에 「글로벌발전구상」(6월)과 「글로벌안보구상」(9월)을 각각 발표하였다.

2 ‘일대일로’는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실크로드경제벨트’ 및 ‘해상실크로드’의 약칭으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협력국가간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프로젝트이다.

II. 안보환경 평가

경제안보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가간 교역이 축소되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경제안보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특히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을 무기화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주요 곡물 생산국들도 수출을 통제하면서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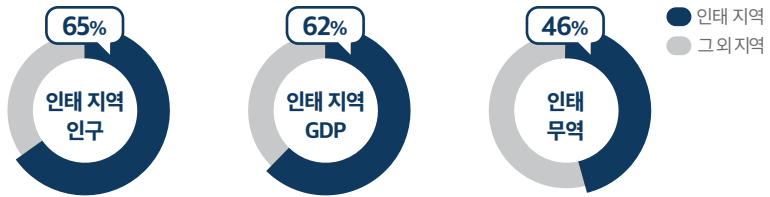
공급망 충격을 겪은 국가들은 경제 블록화를 통해 공급망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생산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는 ‘리쇼어링’ 또는 동맹국으로 이전하는 ‘프렌드 쇼어링’ 정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이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전환하면서 자유무역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가치사슬에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첨단기술이 국가안보의 영역으로 다루어지면서 기술탈취·인재유출에 대한 보호 경향 또한 강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 첨단기술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배터리 관련 산업 전반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 인도-태평양 정세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

2020.7월 기준, 출처: Journal of Economic Structures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의 65%, GDP의 62%, 무역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해상 물류 통로가 지나가는 핵심지역이다. 또한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전략 산업의 핵심 협력국들이 속해 있어 경제·기술적 역동성이 높은 지역이다. 역내외 주요국들은 인태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자적인 인태전략을 발표하며 관여를 확대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정세

- ✔ 지정학적 중요성 부각 속 인태 지역이 미국·중국 경쟁의 중심지로 부상
- ✔ 인태 지역 국가들은 미국·중국 전략경쟁 속에서 실리외교를 추구
- ✔ 동북아 내 협력 유인은 약화된 반면, 경제안보 경쟁은 심화

인태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중 경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인태지역을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ASEAN)과의 관계 확대를 모색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자국

II. 안보환경 평가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통합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³를 출범시키며 역내 동맹국 및 민주주의 가치 공유국들과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해양 갈등이 격화되며 군사적 긴장도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해양안보 전략을 미국의 역내 개입을 저지하는 방어 위주에서 공세적인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역내 동맹·우방국과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하고, QUAD⁴·AUKUS⁵를 활용한 소다자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인태 국가들은 미·중 경쟁 속에서 실리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중국 사이에서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 연대와 협력을 추진하는 전략으로 실리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미국·중국 영향력 속에서도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⁶을 유지하며 지역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러시아와 선택적 경제협력을 추진하면서 미국 주도의 QUAD·IPEF에도 참여하며 글로벌 주요국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는 QUAD·AUKUS에 참여하며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아세안·태평양 도서국들과 민주주의 가치연대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 또한 호주와 공동으로 「신안보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NATO 등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위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였다.

.....
3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는 2022년 5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출범한 인태지역 14개국간 다자 경제협의체로,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의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4 QUAD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이 참여하는 안보대화체(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이다.

5 AUKUS는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이 참여하는 안보 협력체이다.

6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ASEAN)이 지역내 다자협력체계 구축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개념이다.

동북아 내 협력유인은 약화되고, 경제안보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국·러시아·북한 간 밀착 구도가 형성되면서, 북핵문제 등 동북아 안보 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일본·중국 3국 간에는 과거사, 해양 관할권, 해양·대기 환경오염 등 다양한 현안들이 상호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동북아 국가 간에는 경제·기술 분야의 경쟁 또한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일본은 각각 자국 주도의 다자간 FTA⁷ 가입국을 확대하며 역내 무역질서 주도권 확보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각국이 인공지능(AI)·양자 등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에 주력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일본과 반도체 생산과 개발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안보와 기술이 연계되어 경제안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우호국간 경제·기술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7 중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일본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을 각각 주도하고 있다.

3 한반도 정세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속적 대화 제의에 전혀 호응하지 않은 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에만 집착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는 가운데, 주변 국가들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 한반도 정세

- ❑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우리 안보의 실질적 위협으로 대두
- ❑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난 악화 등으로 곤궁이 심화
- ❑ 한반도 주변 4국은 남북관계 교착국면 속 영향력 확대를 도모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반도에 실체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은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신형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전략·전술 무기 개발을 이어가며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2022년 들어 극초음속 미사일·ICBM 등 미사일을 역대 가장 많이 발사(70여발)했고, 선제 핵사용과 전술핵 운용을 시사하는 핵무력정책법(2022.9.8.)을 채택하였다. 또한 우리의 정당한 군사 훈련을 빌미삼아 북방한계선 남측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동·서해 해상완충구역내 포격을 감행한데 이어,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등 남북군사합의를 계속 위반하였다. 현재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도외시한 채 호시탐탐 우리 사회를 교란하기 위한 각종 도발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난과 방역통제로 곤궁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대북 제재와 방역 봉쇄 장기화로 김정은 집권 이래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만성적 식량부족에 보건위기까지 겹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북한 당국은 방역통제를 일부 완화하고 중국·북한간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고 있으나, 경제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며 민생대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비현실적 정책과 잦은 강제동원으로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국방 분야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부각하고, 경제 실패 책임은 간부들에게 전가하며 정권 안정에만 주력하고 있다.

■ 북한이 처한 삼중고(三重苦) 상황



한반도 주변 4국은 남북관계 교착국면 속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대남 거리두기로 일관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정세 변화를 주시하는 가운데, 독자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외연 확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재와 외교적 관여를 병행하며 북한의 비핵화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을 역내 주요 도전요소로 상정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는 가운데,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Ⅲ

자유와 연대의 협력외교 전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2023.1.1.) 중에서

-
- 1 |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 2 | 새로운 수준으로 한·미·일 협력을 제고
 - 3 | 인류보편적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 4 |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1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지난 70년에 걸쳐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양국 국민의 번영된 삶에 기여해 왔다.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위협과 글로벌 전략 경쟁의 심화 등 안보 환경의 변화와 함께, 공급망 재편, 핵심기술 경쟁, 기후변화 등 새로운 공동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미동맹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층 진화해 나가야 한다. 이에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자유민주 통일 달성이라는 핵심 과제에 더하여, 양국간 역할 공간과 협력 범위를 글로벌 범주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

한미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현한다.

한미동맹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한미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발전과 진화를 거듭해 왔다. 2022년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10일 만에 방한한 조셉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목표에 합의 하였다. 이듬해인 2023년 4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12년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2023.4.24.~29.)하여 한미정상 회담을 개최(2023.4.26.)하였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결과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와 인태 지역 내 협력 확대를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새로운 동맹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자유·법치·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산업·과학기술·문화·정보 동맹이라는 5대 기둥을 세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미 양국은 그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한미동맹의 지리적 외연을 글로벌 범주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 협력의 범위를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경제안보, 첨단기술, 인적교류, 문화, 정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자유의 연대를 바탕으로 인태 지역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의회연설(2023.4.23.) 주요내용

“자유 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 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	
미국의 리더십과 자유질서의 태동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자유 수호를 위해 정의로운 개입을 선택했으며, 전후(戰後) 자유세계 질서를 구축하였음
동맹의 출발	‘6.25’ 전쟁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킬 수 있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새로운 동맹 시대를 개막하였음
동맹의 진화	한강의 기적,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파병, FTA 체결과 상호 투자·교역의 확대, 국민간 교류와 유대를 통해 가장 긴밀한 동맹으로 발전하였음
‘자유 의 나침반’ 대한민국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에 맞서 민주주의와 법치 시스템을 수호하기 위해 자유세계가 함께 용감하게 맞서 나가야 함
원칙있는 대북정책	굳건한 한미 공조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원천 봉쇄하고, 북한 주민이 처한 참혹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조해야 함
인태전략	역내 규범 기반 질서 강화를 주도하면서,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맞춤형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갈 것임
새로운 여정	한미는 정의, 평화, 번영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것임

III. 자유와 연대의 협력외교 전개

■ 한미정상회담 주요 성과



분야	주요 성과
 <p>안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축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정상간 별도 선언(「워싱턴선언」)으로 문서화하여 최고 수준의 의지 결집 ▶ 한미동맹을 핵이 포함된 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p>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간 경제안보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질적으로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기술 분야 상호투자 확대 ▶ 「인플레이션감축법」·「반도체과학법」의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p>과학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 협력을 주도할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 퀀텀 분야 협력을 위한 ‘양자 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 채택 ○ 우주 협력 촉진을 위한 ‘우주탐사 협력 공동성명’ 체결
 <p>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교류와 문화 콘텐츠 협력을 촉진하는 ‘문화동행 프로그램’ 확대 ○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출범
 <p>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의 수집, 공유, 분석 관련 공조 심화 ○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프레임워크’ 채택 ○ 한미동맹의 협력범위를 사이버·우주 공간으로 확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미국의 확장억제⁸를 확고히 한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 시기에 전면 중단되다시피 한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재개하고 이를 확대하면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한미

⁸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핵·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체계,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영하여 억제력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동맹의 협력 공간을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협의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한미간 국가안보실(NSC) 차원의 전략 협의체를 포함하여 외교·국방(2+2) 장관회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다양한 외교안보협의체를 활용하여 전략적 소통과 정책 공조를 펼칠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을 맞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선언」을 채택하였다. 한미 정상 차원에서 확장억제 운영 방안을 적시한 최초의 합의문인 「워싱턴선언」은 양국 최고 리더십의 확장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로써 한미 군사동맹은 핵무기를 포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군사 동맹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 「워싱턴선언」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확장억제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장억제를 통한 강력한 상호방위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 ○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확장억제를 약속
핵협의그룹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에서 △확장억제 강화 △핵·전략 기획 △복합 핵·미사일 위협 관리 등 협의 ○ 핵위기시 신속하고 강력한 공동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핵 대응 도상연습(TTS) 도입
한국역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시 미국의 핵작전에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의 참여
미국 전략자산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 등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

III. 자유와 연대의 협력외교 전개

「워싱턴선언」에 따라 창설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동맹 간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 체계, 협의 체계를 더욱 강화시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일 것이다. 한미간 북핵 관련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북핵 위협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억제전략을 가동할 것이다. 또한 정례적으로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TTX)과 핵 대응 도상연습(TTS)을 실시하고, 한반도 인근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여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

한미간 경제안보·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경제가 곧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사는 오늘날 시장의 변화와 첨단기술 경쟁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국가안보실(NSC)간에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하고,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동맹의 바탕 위에서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동맹으로 나아갈 것이다.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공급망과 질서있게 작동하는 외환시장은 양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아울러, 반도체·배터리 등 주요산업 분야의 양국 기업간 상호투자 확대는 양국 국민들에게 호혜적인 혜택과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AI △양자기술 △바이오 △우주항공 △원자력 △재생에너지 △환경 △보건 등 첨단·핵심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새로운 수준으로 한·미·일 협력 제고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등 도전 요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3국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여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한·미·일 3국 정상은 2022년 6월 NATO 정상회의 계기에 한 자리에 모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같은 해 11월 한·미·일 정상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두 번째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3국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23년 5월 G7정상회의시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 긴밀한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를 추진한다.

한·미·일 정상은 2022년 11월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기술·에너지 분야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3국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은 2023년 2월 호놀룰루에서 국가안보실(NSC)간 제1회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하였다. 앞으로도 한·미·일 3국은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한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고, 핵심·신흥기술의 진흥과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III. 자유와 연대의 협력외교 전개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일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한·미·일간 공통된 인식을 토대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미·일은 공동의 가치 기반을 토대로 안보협력 뿐만 아니라, 경제, 공급망, 인적 교류를 포함한 사회문화 분야까지 협력 아젠다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은 정상·당국자 간에 긴밀한 대화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청년을 비롯한 사회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여 미래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다.

■ 「프놈펜 공동성명」(2022.11.13.)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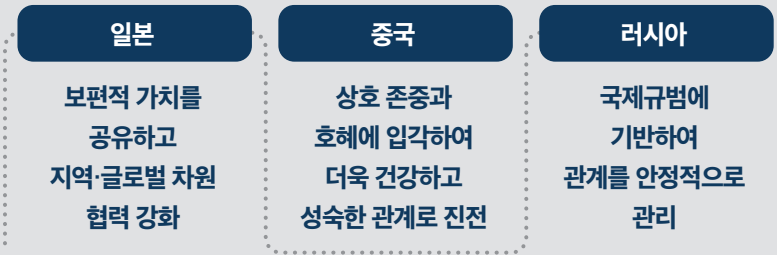
한·미·일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고 전례없는 수준의 3국 공조를 평가

북핵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을 확인○ 3국간 북한 미사일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
경제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국간 경제안보대화체를 신설○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간 연대를 강화
인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인태전략에 대한 미국, 일본의 지지를 확인
국제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

3

인류보편적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 일·중·러 외교전략 요지



일본 |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가깝고 중요한 이웃이다. 그간 과거사 현안 등으로 관계가 경색되었으나, 엄중한 안보환경 아래에서 한일 양국이 역내 안보 공조를 비롯해 공동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주요현안 협의를 가속화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한일간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한일 정상은 2022년 9월과 11월 회담을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히 현안을 해결해 협력을

III. 자유와 연대의 협력외교 전개

확대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러한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2023년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2011년 12월 이후 12년만에 일본을 양자 방문(3.16~17.) 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52일만인 2023년 5월 7일 기시다 일본 총리도 일본 총리로서는 12년만에 한국을 양자 방문(5.7~8.)하였다. 이를 통해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양국 관계의 개선 움직임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2023년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산업, 과학, 문화,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정부는 강제징용과 관련 민관협의회 개최와 공개토론회, 피해자 직접 방문 등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2023.3.6.)하였다. 이번 해법은 우리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 원고인 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1965년 한일 수교 당시 이루어진 청구권 협정과 2018년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그간 악화된 채 방치해오던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대승적 결단이자 우리의 주도적 해결방안으로서,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어나갈 것이다. 2023년 5월 현재 대법원 판결의 원고 15인 중 10인이 판결금을 수령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원고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다.

일본은 해법 발표 당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관련 정부입장 발표에 대해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⁹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2023년 5월 방한시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힘들고 슬픈

9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 협력관계 구축의 중요성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양국관계를 정치·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글로벌 이슈 등에서 균형되고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험을 하신 데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의 기여 가능성은 계속 열려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 발표와 정상 방일을 계기로 한일관계의 정상화라는 목표를 가지적으로 달성하였으며,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경제, 안보, 문화, 인적교류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다.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활발한 인적교류와 상호 이해증진을 추진한다.

정부는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의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한일 관계의 과거를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한일간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하여 양국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교류를 보다 확대하고, 미래세대간 소통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공외교 등 다양한 민간 차원의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전국경제인 연합회」(전경련)과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은 공동으로 미래세대의 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한일미래파트너십기금」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정치, 경제는 물론 사회, 문화, 인적교류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어지도록 일본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중국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하여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간다.**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30년간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제는 한중 양국이 그간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으로도 한층 도약하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차원에서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체감형 실질협력을 확대한다.

양국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중 상호간 다양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을 포함한 외교장관 상호방문과 정례 소통, 외교차관 전략대화, 차관급 2+2 외교안보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교류와 소통을 활발히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공급망 관리, FTA 후속협상, 미세먼지·기후변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낼 것이며, 인적 교류 확대와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국익과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 기조로 임한다.

정부는 우리 주권과 권익에 대해서는 국익과 원칙에 기반하여 일관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현안 관리를 위한 상시소통 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사드 문제는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

러시아

국제규범에 기반하여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2022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였다. 주요국들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일제히 규탄하며 대러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조하였다. 전례없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의 대러 외교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에 동참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국제규범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펴는 등 국제공조에 긴밀히 동참할 것이다.

정부는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러시아와의 협조가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외교적 소통을 지속하면서, 대러 제재로 인한 우리 경제와 러시아 진출 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정세와 대외여건을 주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러 외교정책 방향을 지속 검토할 것이다.

4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자원의 무기화로 인한 공급망 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다층적인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행한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인태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우리의 외교 지평을 한반도·동북아에 한정하지 않고 북태평양, 동남아·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등 인태 주요 지역으로 넓혀 관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내의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정부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9대 중점 추진과제를 이행해 나갈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9대 중점과제

<p>1 </p> <p>규범·규칙 기반 인태질서 구축</p>	<p>2 </p> <p>법치주의·인권 증진 협력</p>	<p>3 </p> <p>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p>	<p>4 </p> <p>포괄안보 협력 확대</p>	<p>5 </p> <p>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p>
<p>6 </p> <p>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p>	<p>7 </p> <p>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p>	<p>8 </p> <p>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p>	<p>9 </p> <p>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p>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추진한다.

아세안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지에 위치한 국가들로 구성된 협력체로, 매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역내 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세계 3위 인구(약 6.6억 명), 5위 경제권(약 3.35조 달러)으로, 세계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주요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에게 아세안은 2위 교역(2021년 약 1,766억 달러) 및 투자(2019~2021년 누적 약 290억 달러) 파트너이자 우리 국민의 1위 방문지역(2019년 약 1천만 명)이기도 하다.

■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



정부는 아세안을 역내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주요 파트너로 간주하고, 인태 전략의 틀 속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경제와 사회 분야 위주의 협력을 넘어 국방·방산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세안이 표방하는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¹⁰’을 지지하면서 한-아세안 관계를 상호 윈윈(win-win)의 호혜적이고 특화된 협력관계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

¹⁰ 아세안은 현재 인태 지역내에서 경쟁중인 다양한 지역협력 이니셔티브를 ‘아세안 중심성’ 원칙에 따라 아세안이 주도적으로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III. 자유와 연대의 협력외교 전개

정부는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협력 분야와 우리의 강점을 조화시켜 디지털, 기후변화·환경,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꾀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 한-메콩, 한-해양동남아 등의 협력 기금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한반도, 남중국해 등 해양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보건안보 등 신안보 분야에서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 「한-아세안 연대구상」 개요

목표

아세안과 호혜적이고 실질적이며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역내 자유·평화·번영 구현에 기여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

> 아세안과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추진

추진 방향

1

인태전략 3대 비전
(자유, 평화, 번영)에 맞춰
한-아세안 협력 추진

2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실천적 추진을 위한
자원 마련

3

한-아세안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격상 추진

역내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심화시켜 나간다.

인도는 인구 대국(14억 7백만 명)이자 IT·우주 분야 강국으로, 우리는 인도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한-인도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을 개선하여 무역·투자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과학기술·인프라 분야에서 양국의 강점을 활용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호주와는 2021년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관계를 격상한데 이어, 2022년 6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K9 자주포 수출 후속으로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디지털 등 미래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한다.

한편, 캐나다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핵심광물·에너지 확보 및 상호 교역 증진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전기차 등 핵심산업 분야의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을 추진한다.

중동·아프리카와 협력을 강화한다.

윤석열 정부는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중동 국가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중동 주요국들과 최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중동 국가들의 국가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핵심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에너지·인프라 등 전통적 분야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수소·우주·보건·스마트팜 등 미래 신성장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우디와는 수교 60주년 계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의 공식 방한(2022.11.17.)을 계기로 양국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전략파트너십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사우디 비전2030¹¹의 중점 협력국으로서 네오프로젝트, 수소, 제조업,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미래 신산업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과는 1980년 양국 수교 이래 우리 정상이 처음으로 UAE를 국빈 방문(2023.1.14.~17.)하여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
11 2016년 4월 사우디는 석유시대 이후의 미래에 대비하여 관광, 물류, 엔터테인먼트, 신산업 등 탈석유 산업 다각화 기반을 마련하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III. 자유와 연대의 협력외교 전개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 원자력·에너지·투자·방산 등 4대 핵심 협력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고 우주·스마트팜·의료 분야에서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늘려 아프리카에 대한 기여외교를 강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2024년에는 우리 정부 최초로 아프리카 각국 정상을 한자리에 초청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협력관계를 한층 격상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중동·아프리카 지역내 분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EU·유럽 국가들과 가치외교·경제안보 공조를 강화한다.

유럽연합(EU)과 유럽 국가들은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 정부는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유럽과 글로벌 이슈에 관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EU는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이슈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있으며, 핵심 원자재·반도체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제안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과의 능동적인 경제안보 공조는 우리의 국익 증진에 필수적이다.

한편, 유럽 국가들과 원전, 방산,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 2022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물자 수출계약 체결에 이어, 방산 협력이 유럽내 다른 국가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폴란드·체코 등 새로운 원전 도입 예정국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우리의 원자력발전 수출 시장을 유럽으로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튀르키예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중앙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아시아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중앙아 지역은 에너지 및 자원 부국이자 차세대 신흥시장으로 우리의 주요 협력 파트너이다. 중앙아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발전 모델을 높이 평가하며, 경제 발전과 산업다변화 추진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기존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교육·관광·보건·디지털·노동 등 포괄적 분야에 걸쳐 중앙아 국가들의 각 특색에 맞는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중남미와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우리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지닌 중남미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경제통상 환경의 급변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중남미와 교역을 증진하고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전략자원과 에너지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또한, 중미 북부 국가를 대상으로 ODA 확대 공약¹²을 충실히 이행하여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다.

동북아 번영과 평화를 위한 한·일·중 3국 간 대화와 협력을 모색한다.

한·일·중은 전세계 GDP의 25%(2021년 약 24.5조 달러)와 인구의 20%(2021년 약 15.9억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번영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포함한 당국간 협의체를 적극 가동하여 역내 평화와 번영의 틀을 다져 나가고자 한다. 또한 환경·기후변화·디지털 전환 분야의 협력을 계속 확대하여 3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초국경적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는 한편, 3국간 인적·문화 교류를 활성화하여 미래지향적 우호 협력관계의 토대를 강화할 것이다.

¹² 정부는 2021~2024년간 중미 북부 3개국(파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 대한 ODA를 2.2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IV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구촌 번영 기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77차 유엔총회(2022.9.20.) 기조연설 중에서

-
- 1 |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 강화
 - 2 |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는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 3 |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정보역량 강화

1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 강화

오늘날 세계는 기후변화, 환경, 보건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자 차원의 협력은 주요국간 전략적 경쟁과 대립으로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 책임외교와 기여외교 강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다자외교 리더십을 강화한다.

윤석열 정부는 원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격과 위상에 부합하도록 다자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고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6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 기후변화,

신흥기술 등 포괄적 안보협력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같은 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은 제77차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글로벌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번곡점에 놓인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연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이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의 대폭 확대를 약속하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5월 G7정상회의에 초청국 정상으로 참석하여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들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일컬어지는 식량과 보건 취약국의 역량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대한민국이 이행할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공약하였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제 평화안보, 인권, 경제·개발 분야에서 우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분쟁지역에 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되도록 국제 평화유지활동(PKO)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성숙한 자유 민주국가로서 그 위상과 국력에 걸맞게 국제 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도록 ODA 규모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외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먼저,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성과를 철저히 관리하여 질적 내실화를 도모한다. 특히, 대한민국이 강점을 가진 디지털 전환, 보건·의료, 기후·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선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토대로 주요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할 것이다.

IV.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구촌 번영 기여

■ 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글로벌 기여외교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긴급 구호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
식량 취약국들의 식량위기 극복 노력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프리카 등 식량위기 국가들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 우리 농업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는 ‘K-라이스 벨트’를 확대
글로벌 보건 역량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해 주요 보건기구에 재정 기여를 확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의 보편적 의료보장 도입 노력을 지원
개도국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개도국 대상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전수를 추진○ 국가별 역량과 수요에 맞춰 통신망 등 기초 인프라를 맞춤형으로 지원
지구촌 공존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린 ODA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혁신적 녹색기술을 적극 공유○ 인도-태평양 지역 내 ‘수소 협력플랫폼’을 구축

신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한다.

보건·기후변화 분야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가 특히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민·관·학 통합 논의 플랫폼인 「세계신안보포럼」¹³을 연례적으로 주최하여 신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 논의를 주도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미래 팬데믹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 주도의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 노력에 동참하고,

13 외교부는 2021년부터 신안보 위협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기구, 학계, 기업 등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1.5트랙 회의인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협상과 플라스틱협약¹⁴ 등 국제 환경분야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올바른 정책정보 제공으로 우호적 해외여론을 형성한다.

대한민국은 경제력 뿐만 아니라 K-POP 등 한류를 포함한 여러 문화예술 분야에서 강력한 소프트파워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호감이 우리 정책에 대한 지지와 우호적 여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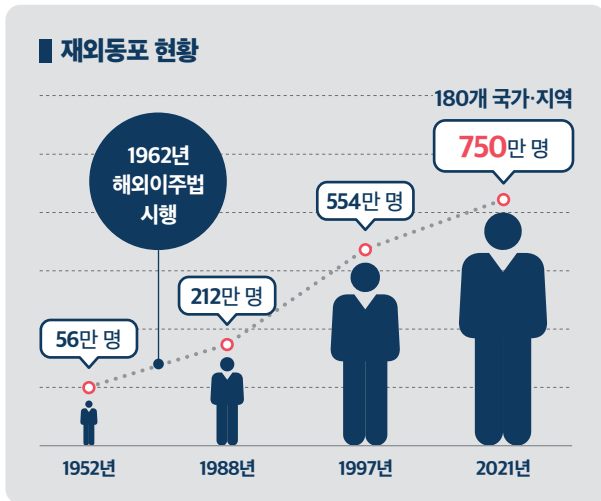
한편,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대미 공공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우호국들과 청년교류를 포함한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
14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신규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하였고, 2025년까지 해당 협약을 수립할 계획이다.

2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는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우리 재외동포는 1962년 해외이주법 시행 이후 양적 성장을 지속하며 현재 전 세계 180여개국에 걸쳐 약 750만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동포사회 구성도 세대 교체와 신규 이민자 증가로 다원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동포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최근 각국의 방역정책 완화로 해외 출국자가 증가하면서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위안상황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재외동포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구축한다.

윤석열 정부는 재외동포사회의 양적·질적 성장에 걸맞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며, 범정부 차원의 정책추진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6월에 신설하는 재외동포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간다.

■ 「재외동포청」 개요

출범 일자	2023. 6. 5.
법적 근거 및 지위	정부조직법에 따른 외교부 소속 외청
직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②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지원③ 재외동포대상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비대면 원스톱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실물여권과 해외체류정보만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용 본인확인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한 본인확인 수단이 마련된다면, 정부 온라인 민원행정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민간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재외공관 방문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비대면 원스톱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해외 위난상황과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 위난상황과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지킴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국가·지역별 위험도를 반영한 여행경보제도를 적시성 있게 운용하고, 대중매체·홈페이지·SNS·오프라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해외 안전여행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정보역량 강화

세계 각국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대해 공세적인 정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교란하려는 북한의 활동도 지속되고 있다.

외국의 정보활동을 차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영국을 비롯한 우방국 정보기관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외국의 은밀한 정보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현재 외국 간첩이나 이와 연계된 세력을 처벌할 수 있는 국내 법체계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밖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한 정당한 대응 기반을 확보해 나간다.

우리 사회 교란을 노리는 북한의 각종 활동에 적극 대응한다.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을 목표로 국내 지하조직을 구축해 왔으며, 우리 사회의 내부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국가 주요 시설·기간망에 대한 테러와 해킹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북한의 우리 사회 교란 시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유관 기관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V

과학기술 강군 육성

“우리 군은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하고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군 74주년 국군의날(2022.10.1.) 기념사 중에서

-
- 1 | 국방혁신으로 AI 과학기술 기반 방위역량 강화
 - 2 |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창출
 - 3 | 장병 정신전력 강화와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1 국방혁신으로 AI 과학기술 기반의 방위역량 강화

「국방혁신」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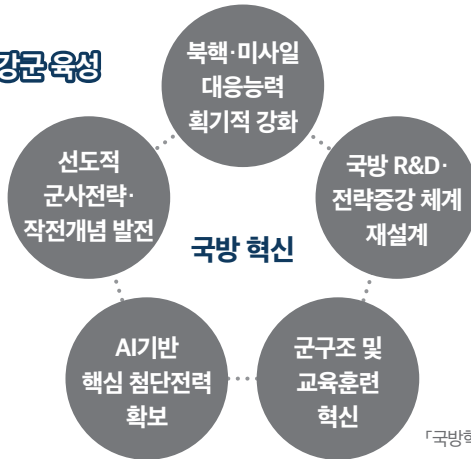
정의

AI·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방 핵심분야를 혁신하여 경쟁우위의 AI과학 기술강군 육성을 추진

5대 중점과제

○ 목표

AI과학기술강군육성



※ QR코드 스캔시
「국방혁신」을 소개하는 동영상
시청할 수 있습니다.

AI·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미래의 전쟁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은 ‘싸우면 이기는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수한 첨단 과학기술 역량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고, 군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방 분야에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강군을 육성하는 국방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5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내실있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에 미래전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¹⁵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보아가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각 군별 시범부대를 운영하여 성과를 검증하면서 점진적으로 적용 부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민간의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민·관·군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한편, 북한의 무인기 위협이 증대되는 만큼 이를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 한편, 드론작전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하여 정찰·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육성한다.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의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합동 우주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우주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찰·통신 위성, 우주발사체, 우주감시체계 등 다양한 우주전력을 확보한다.

또한, 유사시 군의 사이버작전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연합훈련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모든 전장 영역에서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전자기스펙트럼작전¹⁶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15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는 인간이 통제하는 ‘유인체계’와 시 기반의 ‘무인체계’가 상호 보완하며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무기 체계를 일컫는다.

16 전자기스펙트럼은 모든 주파수대의 전자기파를 총칭하며, 전자기스펙트럼작전은 전자기스펙트럼 영역에 대한 군사적 분석, 공격, 방어, 관리 활동을 의미한다.

혁신·개방·융합의 국방 R&D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국방 R&D 투자를 AI, 우주, 양자 등 국방전략기술¹⁷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여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과정 중심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연구자가 자율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한편, 민간에서 미래 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안하는 융합형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전문가와의 협의 채널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 R&D 성과가 국방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정립한다.

AI, 드론, 로봇 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국방 분야에서도 빠른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무기 획득 절차는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술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적시에 신속한 전력화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획득제도를 신설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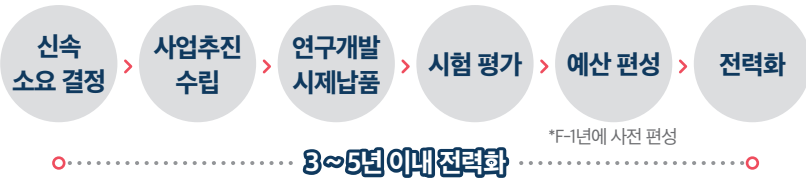
¹⁷ 국방전략기술은 국가안보와 국가과학기술 간의 융합을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핵심기술을 전략적 중요성, 육성 필요성, 기술 혁신성, 확보 가능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신속획득제도

정의

성능이 입증된 기술로 기존 무기체계를 개량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무기체계를 통합하는 등의 경우에 절차를 대폭 축소하여 전력화를 가속화

프로세스 개요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한 과학적 훈련체계를 구축한다.

우리 군은 증강현실, 가상현실, 확장현실,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¹⁸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 환경에서 전투수행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미래형 훈련체계를 개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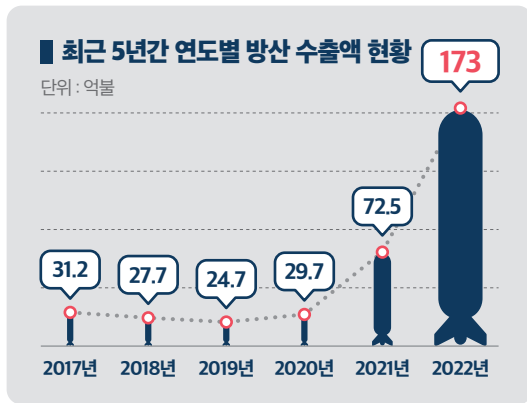
이와 함께 훈련체계 과학화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훈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방종합훈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18 '디지털 트윈'은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쌍둥이)를 만들고 다양한 모의시험(시뮬레이션)을 진행해 결과를 검증해보는 기술이다.

2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창출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최첨단 무기체계를 독자 개발하여 수출하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하였다. 특히, 2022년에는 최근 5년 수출액 평균의 5배 수준인 총 173억 달러를 기록하며 방산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와 경제를 견인할 수출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범정부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수립한다.

방산수출은 상대국과의 안보·외교·정치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으로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수출지원정책이 중요하다.

정부는 2022년 사상 최대의 방산수출 성과를 기반으로 강력한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방산 수출을 확대하면 방위산업을 둘러싼 기반 여건이 강화될 것이다. 이는 다시 첨단전력 건설의 탄탄한 토대가 되어 또 다른 방산수출을 견인할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전략



방산수출 방식을 다변화한다.

국내 방위산업이 발전하면서 수출대상 국가도 증가하였다. 구매국이 늘어나면서 국가별 요구사항도 다양해지고 수출 품목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수출 방식도 구매국과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방안,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 다른 산업과 협력하는 방안 등으로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매국에 장비운용 노하우와 교육을 제공하고 후속 군수지원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포스트 세일즈를 강화하여 추가구매도 이끌어낼 것이다.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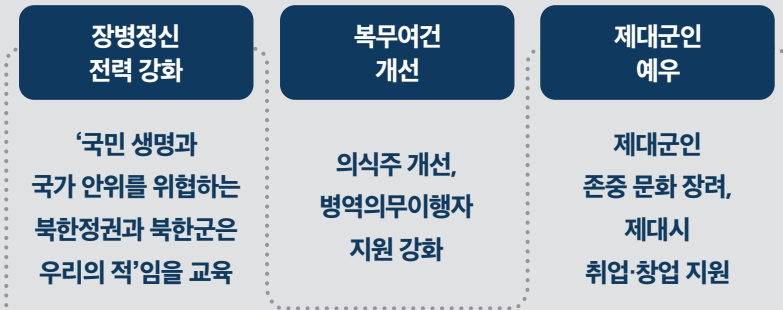
정부는 기술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에 맞게 컨설팅·자금·R&D를 종합 패키지로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수출형 무기체계의 성능 개량과 부품 국산화를 적극 지원하고 민·군 기술 협력을 강화하여 국방기술이 국가 첨단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도록 할 것이다.

3 장병 정신전력 강화와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장병들의 정신전력과 사기는 강군의 핵심 요소이다. 인구절벽으로 국방인력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신전력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병들의 사기를 복돋을 수 있도록 복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 장병 정신전력 강화와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한다.

우리 군은 ‘핵·미사일을 내세워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장병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대적관 확립 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병들의 올바른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을 함양시켜 주는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미래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소통형 교육을 확대할 것이다.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처우를 국격에 맞도록 개선한다.

우리 군은 장병들에게 고품질의 피복류를 보급하고 기호와 건강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며 병영생활관을 개선하여 복무여건이 향상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자가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군의 근무환경과 직무수행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업군인의 처우와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복무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을 예우하는 사회적 문화를 조성한다.

정부는 국민을 대표하여 국방에 헌신한 제대군인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군인들이 전역 이후를 걱정하지 않고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특히, 중기복무 전역 간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의무복무 장병의 자기개발 여건을 충분히 보장해 주도록 노력한다.

VI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77주년 광복절(2022.8.15.) 경축사 중에서

-
- 1 | 북한 핵·WMD 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강
 - 2 |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 3 |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 4 |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 5 |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1 북한 핵·WMD 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강

현재 북한의 핵·WMD는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다. 특히, 최근 북한은 핵무기를 다중화·소형화·경량화하는 가운데, 공세적 핵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 진정한 평화는 굳건한 안보가 바탕이 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획기적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

■ 한국형 3축체계



1 Kill Chain 킬체인	2 KAMD 한국형미사일방어	3 KMPR 대량응징보복
북핵·미사일을 발사 전에 제거하는 공격체계	날아오는 다양한 미사일을 탐지·요격하는 복합 다층 방어체계	북한의 핵·WMD 사용시 압도적·전략적 타격능력으로 응징보복하는 체계

압도적인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한다.

「킬체인」(Kill Chain)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발사 전에 제거하는 방안으로, 이를 위해 감시정찰 자산과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해 나간다.

「한국형미사일방어」(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는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복합 다층 방어체계로, 우리 군은 이 개념을 지속 발전시키며 탐지·요격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은 북한이 핵·WMD를 사용할 경우 압도적인 타격능력으로 강력히 응징하는 방안이다.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이익보다 희생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각인시키며, 북한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한 고위력 응징보복 능력을 확충해 나간다.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여 억제·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능동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자 한다.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초정밀·고위력 미사일 능력 뿐만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기 분야 역량도 모두 통합하여 운용하게 될 것이다.

■ 「전략사령부」 개요

창설 배경	다양한 영역의 전투 능력을 통합 운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를 달성
편성·운용	미사일 및 사이버 분야 전력을 운용하고 우리 군의 역량 확충에 맞추어 전자기, 우주 분야도 편성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구비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만큼 핵사용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 전역을 독자적으로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정찰위성, 초소형 위성체계,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정찰자산을 확충해 나간다.

아울러, 주요 이동표적을 적시에 타격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표적을 식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군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영상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융합·분석·전파하는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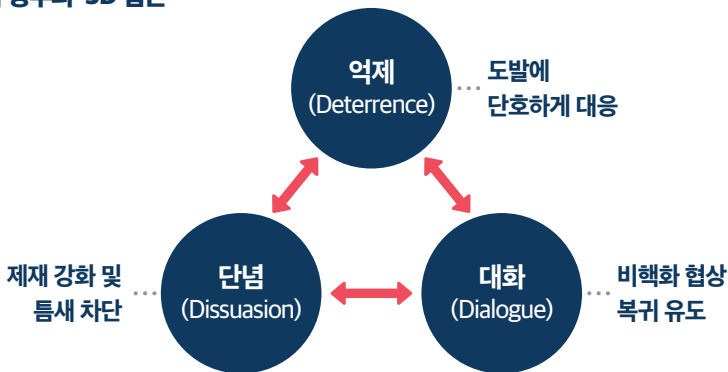
2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거부한 채 오히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다. 북한이 모든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

대화와 협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내실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어렵고 힘든 길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호 신뢰와 대화의 기틀을 잡아가는 바른 길이 될 것이다.

■ 우리 정부의 '3D 접근'



건설적인 북한 비핵화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협상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에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전략적 환경을 만들어

VI.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

가고자 한다.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은 억제(Deterrence)하고, 핵개발은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Dialogue)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종합적 접근 방식을 능동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여 압도적 대응능력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즉각적이며 강력하게 대응한다. 또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암호화폐 해킹 등 신종 외화획득 수단을 적극 차단하여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동시에, 정부는 유연하고 열린 입장으로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 비핵화 이행동력을 확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다. 「담대한 구상」은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번영을 구현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실천 방안이라 하겠다.

「담대한 구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경우,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초기 조치를 실시한다. 이후 비핵화 로드맵이 마련되면, 비핵화 진전에 발맞추어 경제·정치·군사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조치를 동시적이며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간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남북 경제 협력 방안을 협의하며, △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 △경제 발전 등 3대 분야의 5대 사업¹⁹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정치·군사적 차원에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실질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

19 '5대 사업'은 ①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② 항만·공항 현대화 ③ 농업기술 지원 프로그램 ④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⑤ 국제투자·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 「담대한 구상」 초기조치 주요내용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Resources-Food Exchange Program)

- > 제재 대상인 북한 광물자원의 수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해당 대금을 식량·비료·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 구입에 활용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

- >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농업 등 민생협력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이후 비핵화 단계에 맞춰 사업을 확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한다.

정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이를 때까지 우방국 및 국제기구와 지속 협력한다.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레짐을 계속 유지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내도록 할 것이다.

특히 핵실험과 같은 중대 도발시에는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우방국들과 조율하여 개별적 대북제재 조치를 병행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외교력을 동원한다.

한편, 북한의 불법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하고자 한다. 북한이 통치자금과 핵·미사일 개발자금 확보를 위해 지속해온 밀수출·밀반입,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등 각종 불법적 활동을 저지하고, 가상화폐 탈취 등 사이버 불법 활동도 적극 차단한다.

3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원칙있는 대북정책’ 기조를 천명하였다. 이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실용적 접근과 유연함은 잃지 않되, 우리의 국격과 핵심가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긴 호흡으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올바른 남북관계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

■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남북간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확립한다.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하여 상호존중의 남북관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또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 남북간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간다.

호혜적이고 실사구시적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한다.

정부는 유연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남북이 함께 이익을 누리는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 이에 남북대화가 개최되면 교류협력, 인도지원 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등 우리가 원하는 의제도 균형있게 협의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본격화될 경우, 남북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까지 함께 구축하는 「남북공동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한다.

한편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하여 남북간 ‘그린데탕트’를 추진한다. 산림·식수·위생 분야에서부터 미세먼지·자연재난에 이르기까지 기후 환경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남북간 교류협력 질서를 정립한다.

그간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단체와 사업자들의 불법과 일탈 행위들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과 접촉하거나, 접촉 결과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여 건전한 민간 교류협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민간 교류단체들과의 협의 플랫폼인 「남북사회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종교·학술·역사 등 사회문화 분야 민간 단체들과 민·관 소통을 강화하여 교류협력 질서를 정립한다.

상호 개방과 소통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간다.

정부는 역사·예술·문화·종교·체육 등 순수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간 인적교류와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방송·언론·출판과 같은 ‘소식을 전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남북간 정보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남과 북이 서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4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간 인도주의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간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할 것이다.

■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노력

- 2022.7.19. >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 임명
- 2022.8.25. >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재가동
- 2022.9.19. > 북한인권재단 설립 노력 및 통일부 장관 추천이사 인선
- 2022.11월 > 제77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 2023.3.3. > 북한인권증진위원회 발족
- 2023.3월 > 북한인권현황 연례보고서 발표

국내외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협력

- 2022.10.31. > 북한인권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강화 (민관 워크숍)
-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유엔서울인권사무소 활동 지원
- 2022.12.14. > 「2022 북한인권 국제대화」 개최
- > 시민단체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20억원 규모) 개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외 협력을 강화한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인류 보편적 가치와 동포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 미래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 증진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우리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북한 인권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내외에 사실에 기반한 실상을 널리 알려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촉구하며,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도 강화해 나간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외부세계의 정보를 더욱 많이 접하도록 하여 그들이 처한 인권 실상을 제대로 깨닫도록 한다.

정부는 국내외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역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당사자들이 고령화되면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 확인과 정례적 대면·화상 상봉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희망하는 국내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북한 가족에게 보낼 영상 편지를 제작하거나 향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미래 교류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국군포로·납북자·역류자들의 생사와 소재를 확인하고, 나아가 자유의사에 따른 송환도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유엔, 국제기구, 유관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일관되게 추진한다. 특히 북한에 식량난이나 자연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긴급 구호를 신속하게 실시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유엔 안보리 제재의 틀 내에서 진행하고, 제재 면제가 필요한 사안은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한다.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애로를 겪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책적 수요가 한층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분야별 최적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들이 통일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적응을 돕고 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각자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소외 계층이나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위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안전망도 확대해 나간다.

5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한반도 분단 상황이 7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국민이 분단을 당연한 현실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다. 분단국가에서 통일 과제는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분단이 장기화하면서 통일은 국민의 관심으로 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다.

통일의 청사진과 추진전략을 담은 새로운 통일미래 비전을 정립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통일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구상으로서, 「新통일 미래구상」(가칭)을 마련하고자 한다. 「新통일미래구상」은 자유, 인권, 소통, 개방 등 보편적 가치와 덕목의 실현을 추구하며,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관 협업 플랫폼인 「통일미래기획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통일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개요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30여명 위원 (통일부장관 직속의 민간 자문기구) > 5개 분과위원회(△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도·인권 △국제협력) 설치
기능	△통일미래 정책 제안 △국내외 통일 공론화 사업
운영	△매분기 1회 위원회 회의 개최 △매월 1회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23.2.28 발족 △3.15 제1차 회의 개최

VI.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

한편,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²⁰도 2024년에 3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그동안 달라진 국제정세와 남북 역학관계 등 통일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통일 대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알린다.

균형있고 건전한 통일 의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한 당국이 선전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이 아니라, 탈북민들이 직접 겪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실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할 것이다. 이에 대상별·주제별로 북한 실상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것이다.

자유민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통일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통일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그 일환으로 2030 청년세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국민이 통일·대북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사회적 대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한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요국들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고 국제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통일외교도 중요하다. 이에 자유·민주·인권예 기반을 둔 통일 비전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킨다.

20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정부는 자주·평화·민주 기본원칙을 토대로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완성' 단계를 거치는 점진적 통일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이다.

자유민주적 통일교육을 강화하여 미래세대의 통일인식을 고취한다.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에 바탕을 둔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유와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의 바탕 위에서 올바르고 균형잡힌 안보관과 통일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를 교육할 것이다.

VII

글로벌 경제안보 대응체제 확립

“우리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된 경제안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
자유롭고 개방된 글로벌 경제안보 질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2022.5.10.) 만찬사 중에서

-
- 1 |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 2 | 핵심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 확보
 - 3 | 핵심·신흥기술 보호와 협력 강화
 - 4 |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경제 전환 가속화

1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 경제안보의 개념

- ▼ ‘국내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품목 등이 원활히 유입되고, 부적절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이 유지되고 경제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상태’

※ 출처 : 현재 의원 발의로 추진중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세계는 기후변화, 팬데믹, 에너지·디지털 전환 등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개별 국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보다는 경제정책을 외교·안보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을 선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문제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즉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융합된 경제안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 국가로서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 특히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면서 핵심물자 부족, 물가 상승 등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을 높이며, 경제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인 경제안보 외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주요국과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을 주도한다.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의 첫 번째 과제는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미국, 일본, EU, 호주 등과 경제안보 전반에 대한 전략적 소통과 정보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이 새롭게 형성 중인 경제협력 플랫폼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과 이익에 부합하는 역내 규범과 경제질서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정상·각료급 다자 경제기구와 협의체에서도 관심 의제를 제기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관철할 것이다.

해외 충격에 대한 공급망 대응능력을 확보한다.

또 다른 과제는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여 위기에서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출범하여 재외공관을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경제안보외교센터」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공급망 교란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 경제안보외교센터 개요



설립 목적	주요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및 경제안보 외교 정책 수립 지원
설립 일	2022.5.30. 개소
구 성	센터장 1인, 국내 전문관 10인, 재외공관 현지 전문관 등
주요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망·첨단기술·제재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 모니터링 및 분석 유사입장국 1.5트랙 협의체,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대내외 정책 소통·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전문가 자문, 경제안보 외교포럼 등 진행

VII. 글로벌 경제안보 대응체제 확립

앞으로 정부는 핵심광물과 같은 주요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국가들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여 자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또한 주요 에너지 생산 국가들과도 협력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에도 적극 참여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확보할 것이다.

에너지·디지털 전환을 주도한다.

정부는 원전·수소 등 저탄소 청정에너지에 관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많은 국가들이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해 원전 도입을 고려하는 추세에 발맞춰 우리 대형 원전, 선진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전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사회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 디지털 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선진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술표준 협력을 확대하여 국제사회 디지털 경제질서 구축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2

핵심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 확보

대한민국은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국가로서, 글로벌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핵심 광물을 비롯한 주요 자원의 경우, 일부 국가에 공급이 편중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적극적 양자 및 다자 외교를 통해 핵심 공급망을 확고히 구축한다.

윤석열 정부는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경제안보 분야에서 대외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먼저 호주, 인도네시아 등 핵심광물 보유 국가들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핵심광물 의존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수급 구조를 개선할 것이다. 또한,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전략기술 공조가 필요한 국가들과도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²¹ 등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다자 협력체에 적극 참여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핵심광물 및 원자재 수급에 대한 정보공유, 투자촉진, 공동표준 마련을 위해 협력한다.

한편, 대한민국과 교역이 가장 많은 나라인 중국과 공급망 협력을 피하는 것은 우리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한중간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양자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다.

21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해 2022년 6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투자 네트워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표준 제고 △재활용 촉진 등을 핵심 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 안정에 기여한다.

정부는 석유와 가스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국제 에너지 협력을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같은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글로벌 에너지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에 설치한 「글로벌 에너지 협력센터」와 전세계 재외공관의 에너지 담당조직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에너지 동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증진한다.

정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계획 및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식량안보 로드맵 등에 지속 참여하며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해 나간다. 아울러, 식량위기 취약국들에 대한 맞춤형 인도적 지원을 꾸준히 실시하여 국제사회의 기아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재외공관과 연계하여 해외발 공급망 교란을 조기 포착한다.

정부는 해외에서 촉발된 공급망 교란이 국내 산업과 민생으로 파급되는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재외공관 「경제안보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 정세와 외국정부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정보를 유관부처와 공유하여 적시에 대응조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3

핵심·신흥기술 보호와 협력 강화

글로벌 경쟁이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면서, 핵심·신흥기술은 국가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미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기술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 특히,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하여, 바이오·배터리·반도체·디지털·퀀텀(양자)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우방국과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²²을 추진하면서, 국제적 기술표준 수립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핵심·신흥기술 보호와 협력을 위한 제반 여건을 정비한다.

정부는 3대 기술안보 관련 법령인 「대외무역법」, 「산업기술보호법」,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재정비하여 핵심·신흥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정을 확충하고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외국과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핵심·신흥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한 해외 인재들이 국내로 쉽게 들어와 활동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도 함께 개선할 것이다.

22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은 동맹·우방국을 중심으로 핵심 기술을 공유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 국내 핵심자산 보호를 위한 기술안보 제도 현대화

기술안보 대응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3대 기술안보 법령을 재정비

대외무역법(수출통제)

- > 기존의 다자체제 전략물자(군용·이중용도 물자) 통제를 강화하고, 민감품목 등 비전략 물자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

산업기술보호법(핵심기술 유출 방지)

- > 수출 승인·신고제 개선, 기술유출 목적의 M&A에 대한 통제 강화 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호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투자 심사)

- >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심사대상을 확대하여 투자 모니터링을 강화

핵심·신흥기술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정부는 핵심·신흥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우방국과 신흥 기술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한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한미 민간우주대화 등 양자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우주 탐사 및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한미 우주탐사 협력 공동성명」²³ 서명(2023.4.25.)을 계기로 한미 간 우주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인력·정보·지식 교류를 본격화해 나간다.

한편, 디지털·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유럽과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호라이즌 유럽」²⁴ 사업에 준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한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선도국들과 인적 교류와 연구개발 협력을 심화해 나간다.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국 항공우주청(NASA)는 공동성명을 통해 심우주 통신·항법, 달에서의 과학기술 연구, 달거주 활동을 위한 로봇과 모빌리티 개발, 우주의학 등의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개념연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24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은 EU가 기초과학 역량 제고와 기후변화·디지털 전환 등을 위해 2021-2027년 총 955억 유로(약 129조 원)를 투자하는 R&D 지원사업이다.

핵심·신흥기술 관련 국제규범과 기술표준 형성을 선도한다.

정부는 핵심·신흥기술 관련 국제규범의 초기 논의 과정에서부터 주요 기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의 입장과 이익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나가고자 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표준화기구, 글로벌인공지능파트너십 등 기술 관련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핵심·신흥기술의 표준 형성 과정을 주도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거점 재외공관과 국내전문기관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민·관 국제협력을 촉진한다.

4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경제 전환 가속화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를 달성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로부터 메탄 감축, 전기차 보급 확대, 기후기술 촉진 등 글로벌 기후변화 협력 이니셔티브에 대한 동참을 요구받고 있다. 이외에도 EU 탄소국경조정제도²⁵와 같이 국가간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정책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경제 논의에 동참한다.

글로벌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그 심각성이 가중되면서, 유엔·OECD·G20 등 주요 국제협의체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다배출국이자 6위권의 무역국가로서, 온실가스 감축, 기후재원 조성, 국제탄소시장 운영 등 주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파리협정」의 '1.5도'²⁶ 목표에 부합하도록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미 2차례(2020.12월, 2021.12월) 상향 갱신하였다. 이에 여타 온실가스 다배출국도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다양한 감축정책을 도입하여 「파리협정」이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정부간 양자 기후협정도 적극적

25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EU가 탄소누출(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이 이전되어 탄소배출도 이전되는 현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해 제품 생산시 발생한 탄소발생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26 파리협정에서는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다.

으로 체결하여 국외 감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에너지 믹스 방안을 검토하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반영한 저탄소 에너지 확충 방안도 수립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EU의 기후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주요경제국포럼」²⁷에서 메탄 감축, 무공해 차량 보급, 해운부문 탈탄소화 등 부문별 공동목표 수립을 위한 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IPEF의 청정경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국가 간 탈탄소화 노력이 골고루 이뤄지고 그 결과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비롯한 탄소가격제 무역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대외경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글로벌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참여한다.

정부는 ‘기후변화’와 함께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저해하는 3대 환경 위협으로 지목받고 있는 ‘생물다양성 손실’과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규범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²⁸를 성실히 이행하고 여타 당사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유엔플라스틱협약」에 대해서도 시민사회, 기업 등 국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우리의 참여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27 「주요경제국포럼」(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 MEF)은 청정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09년 3월 설립한 협의체로, G20 회원국과 주요 개발도상국들이 참여하고 있다.

28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022.12월)에서 채택되었으며,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경제 제반 분야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녹색경제 전환을 지원한다.

개발도상국이 이상기후와 재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지원한다. 특히,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본부 소재국이면서 상임이사국이자 최대 공여국으로서 GGGI의 위상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전환 지원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녹색기후기금(GCF),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아시아 협력사무소 등 한국에 소재한 기후분야 국제기구와 협력을 확대하고, P4G²⁹와 같은 협의체를 매개로 유사입장국들과 공조해 나간다.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개요



개요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6월 서울에 설립되었으며, 2012.6.20.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국제기구로 공인
목적	개발도상국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가 검토한 녹색성장 모델을 공유
창립 회원국	덴마크·호주·캄보디아·영국·UAE·베트남 등 18개국

29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는 녹색경제 관련 5대 중점분야(식량,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의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파리협정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체이다.

VIII

신안보 이슈에 능동 대응

“기후변화의 위기, 보건과 디지털 격차는 세계시민의 자유,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경제포럼(2023.1.20.) 특별연설 중에서

-
- 1 |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 2 | 보건안보 체계 개선
 - 3 | 국가 대테러 역량 강화
 - 4 | 국가 차원의 재난 위기관리체계 강화

1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첨단기술과 주요정보를 노리는 해킹조직의 공격이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랜섬웨어를 유포하여 가상자산을 획득하고 해외 파견 IT 인력을 동원해 외화를 벌어들여, 이를 핵·WMD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사이버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윤석열 정부는 모든 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각급기관의 역할 및 협력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반영한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사이버안보에 대한 비전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 「사이버안보법」 개요

입법 취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사이버위협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공급망보안 위협 예방 및 해킹조직 행적 추적을 위한 국내외 디지털 정보 확인②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운영 및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수립·시행③ 사이버위기경보 발령, 민관협력, 국제기구·외국정부 등과 국제협력

아울러 국가차원의 사이버안보 위협을 예측하고 위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통합대응 조직을 설치하여 사이버위기 관리 능력을 제고한다.

글로벌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활동을 강화한다.

특정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조직의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우선,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IT 인력 위장 취업에 적극 대응하여 북한 정권의 불법자금유출을 차단한다. 나아가 악의적이고 심각한 사이버공격에는 가용 자산을 총동원하여 공세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국가를 배후로 둔 해킹조직들의 활동을 중점 감시한다. 특히, 미국과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포함하여 글로벌 사이버 공격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공동 대응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문성을 갖춘 사이버전 인력을 확충하고 핵심기술을 고도화하여 사이버안보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비해 나간다.

국제사회와 사이버안보 공조를 강화한다.

정부는 사이버 범죄 대응에 관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이버 범죄협약」³⁰ 가입을 추진하고, 유엔의 사이버규범 수립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특히 한미는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채택을 통해 전통적인 육·해·공을 넘어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한미동맹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간 사이버 공간의 각종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

30 일명 「부다페스트협약」으로 불리며,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2023년 3월 현재 67개국이 가입중이다.

VIII. 신안보 이슈에 능동 대응

안보 기술·정책·전략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한미는 사이버 공간내 국제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한미간 대북 사이버위협 공조 사례

한미간 공조 사례

- 2021.10월~ > 한미 등 36개국이 참여하는 「랜섬웨어 대응 다자회의」 운영
 •북한 등의 랜섬웨어 공격과 가상자산 불법사용 등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 2022.8월~ > 한미는 「북한 사이버위협 대응 韓·美 실무그룹」을 운영
 •북한 IT 노동자들의 외화 획득 및 가상자산 탈취 등 대응방안 논의
- 2023.2.3... > 한미 합동으로 북한 해킹조직이 탈취해 보유하던 암호화폐 지갑 동결
- 2023.2.9... > 한미 합동으로 북한 사이버공격 위협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 권고문 발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개요



또한 주요국과 사이버 정책 협의를 정례화하고,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는 사이버 위협 공동 대응을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악성 사이버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사이버 공간상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한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사이버안보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사이버위협 정보 교류를 확대하여 책임있는 선진 국가의 역할을 다해 나간다.

사이버안보 기반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예측하지 못한 사고 발생시 이를 신속히 감지하여 정상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대책과 피해복구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디지털정부·클라우드서비스의 경우, 보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기업·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산·학·연 협력으로 사이버안보에 필요한 기술·정책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생태계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2 보건안보 체계 개선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 감염병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의 보건위기 대응을 위해 새로운 국제규범과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며, 보건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국제사회내 역할도 증대되고 있다.

공중보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생물테러 감염병을 포함한 신·변종 감염병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민간과 백신·바이오 의약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여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감염원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 역내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는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글로벌 보건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보건안보 외교를 추진한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대두된 국제사회의 글로벌 보건체계 강화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 G20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국제기구·민간과 감염병 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제보건규칙」³¹ 개정과 「팬데믹 조약」³² 협상 등 감염병에 대비한 국제규범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31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규범으로, 1969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되고 2005년 전면 개정되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제사회의 기아·질병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
32 2021년 12월 WHO는 코로나19 교훈을 바탕으로 팬데믹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제규범 마련을 위해 정부간 협상기구 설치를 결정하였고, 2024년 5월 세계보건총회 앞 팬데믹조약 최종문안 제출을 목표로 회원국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3 국가 대테러 역량 강화

해외에서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와 해적에 의한 우리 국민 위해(危害) 가능성이 지속 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테러단체를 지지하거나 해외 테러단체로 테러 자금을 조달 하려는 시도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드론·3D 프린팅 사제 총기 등 신기술을 악용한 테러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어 급변하는 테러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과 이를 반영한 법제 개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테러단체 연계 활동과 테러자금 조달 차단 역량을 구축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테러위험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AI·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통해 테러 단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인물들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³³ 회원국으로서 테러 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융 거래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국 금융정보분석원과 정보협력도 확대할 것이다.

변화하는 테러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드론·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은 상황에 따라 테러에 악용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같은 테러수단 진화에 대응하여 범정부 차원의 테러 예방대책을 지속 보완할 것이다. 나아가 테러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여 현행 「테러방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33 1989년 G7 합의로 설립되었으며, 자금세탁·테러자금 차단 이행을 추진하는 기구이다.

한편, 신종테러 상황을 가정한 대테러 유관 기관들간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국가 대테러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한다.

국제사회와 테러 대응 공조를 강화하고 협력 채널을 다양화한다.

정부는 「유엔 세계 대테러전략」³⁴에 발맞춰 유엔 총회와 안보리 결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반ISIS 국제연대회의」 등 테러 방지를 위한 다자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또한 유엔 대테러실·유럽 대테러정보협력체 등 국제기구와 우방국 대테러기관과 접촉면을 확대하여 테러와 관련한 정보 입수 채널을 다양화한다. 특히 해적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 우리 국민피랍과 선박나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협력을 강화한다.

대테러 작전부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국제 테러단체나 해적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에 대한 해외 테러를 가정한 원격지 전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피랍 위험성이 큰 지역의 인근국 대테러 부대들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
34 「유엔 세계 대테러전략」은 2006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기존의 대테러 결의·협약에서 산발적으로 다루어지던 대테러 전략을 통합하여 테러리즘 예방·대응조치에 관한 국가 차원의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 국가 차원의 재난 위기관리체계 강화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재난의 양상도 복잡해지고 대형화된다.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재난 위기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AI·빅데이터 관련 첨단기술의 발전은 위기관리체계를 혁신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국가안보 및 재난 위기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개선한다.

국가안보 위기와 재난 위기는 서로 다른 성격의 여러 부처들이 담당하고 있어 관계 기관간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협력체계 발전을 위한 첫 단계로서 관계 기관간 명확한 임무와 역할을 먼저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간 실시간 정보공유와 상황전파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특히, 국가안보 및 재난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 범정부 차원의 가용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민·관 협력에 기반을 둔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정립한다.

기후변화로 유례없는 수준의 태풍, 집중호우, 가뭄이 일상화되고 있으나, 도시 인프라는 노후화되면서 대형재난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한 인력과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난관리에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선, 각급 행정·공공 기관과 민간부문·시민단체가 서로 협의하며 소통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나아가 민·관이 협력하여 사고 수습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도출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선제적 재난 대응역량을 구비한다.

최근 재난안전관리에도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활용이 어려웠던 재난안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 AI 기술 등을 적용하여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로봇·영상탐색장비 등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재난대응 첨단장비도 적극 개발하여 재난관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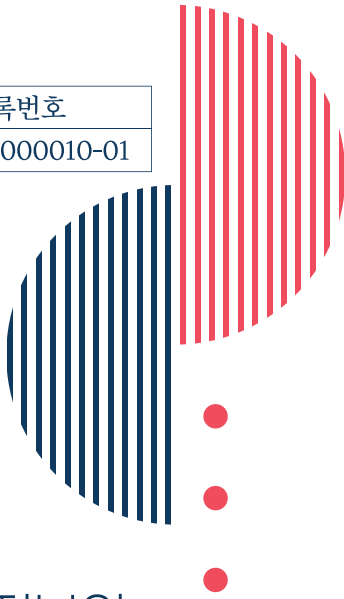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발행일 2023년 6월

발행처 국가안보실

발간등록번호

12-1025000-000010-01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국가안보실